

제258호 (2010. 5. 10)

■ 건설 경기

- 4월 CBSI 2개월 연속 하락, 14개월 내 최저

■ 정책·경영

- 아파트 하자기획소송의 급증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 분석

■ 정보 마당

- 미 캘리포니아주 그린빌딩 동향 분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기업,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적극 변신해야”

4월 CBSI 2개월 연속 하락, 14개월 내 최저

-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하락국면 지속, 작년 SOC 예산증액 효과 거의 소진 -

■ 4월 지수 전월대비 1.2p 하락한 70.5...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론 28.8p 하락

-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1.2p 하락한 70.5를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3월 지수가 71.7을 나타내 전고점인 작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함.
 - 지수는 작년 7월 정부 SOC 예산 급증과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6년 7개월 내 최고치인 99.3을 기록했는데, 이후 올 4월까지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 국면을 지속함.
 - 작년 7월 이후 올 4월까지 지수 하락폭은 28.8p에 달함.

■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내 최저, SOC 예산 증액 효과 소진

- 4월 지수는 지난해 2월 50.0을 기록한 이후 14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로서 작년 정부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통상 3, 4월에는 건설 비수기가 끝나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3월 이후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1~3월 국내 공공부문의 건설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7.1%가 감소(국내 총 건설수주는 6.9% 감소, 통계청 자료 기준)하는 등 재정 효과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수도권 미분양 증가, 일부 주택업체의 위기 등 민간 건설 경기 부진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구 분	2009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92.2	99.3	87.2	96.1	86.4	79.3	82.5	76.3	77.6	71.7	70.5	85.5	74.1	
규모 별	대형	92.3	114.3	107.1	114.3	100.0	84.6	100.0	93.3	92.9	78.6	80.0	92.9	78.6
	중견	97.2	105.9	100.0	110.0	103.4	88.5	77.8	76.9	80.0	70.4	63.0	88.9	66.7
	중소	86.4	74.2	49.3	59.0	50.9	62.7	67.2	55.6	56.9	65.0	67.9	72.9	77.4
지역 별	서울	93.9	114.6	102.7	103.0	102.2	85.7	90.6	85.9	90.1	73.8	74.6	90.7	72.7
	지방	83.6	69.8	64.2	71.1	64.6	69.5	70.2	61.2	59.6	68.4	64.4	77.5	76.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 소폭 상승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 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해 12월 100.0을 기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함으로써 작년 2월(58.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냄. 4월에는 기술적 반등을 보이며 전월대비 소폭(1.4p) 상승한 80.0을 기록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2.9p 상승한 67.9를 기록했으며, 건설 비수기인 1월 55.6을 나타낸 이후 4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 대형, 중견업체와 달리 통상 상반기 계절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지수 흐름을 시현함.

■ 중견업체 지수 7.4p 하락해 전체 지수 하락 주도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대비 7.4p 하락한 63.0을 기록해 지수가 작년 3월(66.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또한 작년 1, 2월과 마찬가지로 1년 2개월만에 다시 중소기업체 지수보다 부진한 현상이 재현됨.
 - 이는 중견업체가 대형 및 중소기업체와는 달리 상황이 어려운 주택사업의 비중이 높고, 최근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한 현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인력수급지수 양호, 자재비 및 자금조달 상황 악화

- 자금·인력·자재 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수급만 양호하고, 자재 수급 및 자재비 상황과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수급 및 인건비지수는 각각 100.2, 85.8을 기록했고, 자재 수급 및 자재비지수는 각각 92.4, 56.2를 기록해 최근 철강재 가격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 역시 각각 전월대비 6.0p, 2.0p 하락한 86.0, 83.3을 기록해 자금관련 상황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아파트 하자기획소송의 급증과 제도개선 방향 모색

- 소송 후유증 심각, 근절책 및 원활한 하자 보수를 위한 개선책 마련 시급 -

■ 공동주택의 보급 확대와 하자 관련 분쟁의 증가

- 국내 주거형태의 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비중은 이미 2000년 47.7%로 높아짐으로써 37.1%에 불과한 단독주택을 추월한 바 있음.
- 이러한 주택구성의 변화는 아파트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함께 제고시켜 하자 보수와 관련한 클레임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변호사(이하 법무법인 포함)와 하자진단업체가 개입된 변형된 하자기획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60건에 불과하던 소송이 2008년에는 290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하자기획소송의 확산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자분쟁에 따른 소송 제기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3
건 수	60건	78건	87건	101건	167건	290건	75건

주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택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09.11)

■ 심각한 각종 후유증 양산

- 하자기획소송은 외관상 하자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하자보수 그 자체보다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비중이 두어져 입주자의 안전성 확보나 주택의 품질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임.
- 하자분쟁의 당사자 간 ‘소송만능주의’가 횡행할 수 있고, 시공업체와 입주자 간 긴장 관계 조성 및 하자보수 요구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입주자 간 갈등 형성 등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지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근절 대책 및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시급

- 하자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주택법」상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그치고 있을 뿐임.
- 우선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하자기획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으므로 하자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하자의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결되어야 함.
 - 하자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이러한 기준의 바탕 위에서 결정되어야 논란을 잠재우고 분쟁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게 됨.
- 현재의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이 성립된 경우 확정 판결에 준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함.
- 「주택법」상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분쟁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업체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제도의 한시적 도입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입주자와 건설업체의 공동 노력이 최선의 해결책

- 입주자는 소송 등을 통한 하자분쟁 처리보다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품질·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자산가치의 증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체는 시공과정에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한 품질개선 노력을 제고하고, 입주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또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음성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해외건설 수주 및 녹색건설 활성화에 주력해야”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 분석* -

■ 전망과 이슈

- 세계 최대 채권투자회사 PIMCO의 CEO인 Mohamed EL-Erian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New Normal로 개념화하고 있음.
- 건설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ld Normal과 대비되는 New Normal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고성장(2003~07년 간 글로벌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4% 상회) → 성장 정체(2008~13년 간 연평균 2.2% 성장 전망. 단, 신흥시장은 지속 성장 예상)
 - 레버리지 확대 및 부동산 버블 형성 → 과다부채 축소 및 부동산 재고 조정
 - 초과수요/공급부족 → 수요위축/공급과잉
 - High-End Market(초고층/고분양가 등 고소득층 대상시장 활성화) → Low-End / Local Market
 - 재정사업으로 경기조절 → (출구전략 시행시)재정사업 위축 및 정부지원 약화
 - 민간기업 주도 → 정부 역할 및 민/관 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산업 전망과 10대 이슈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세계 건설시장은 저성장세, 신흥시장은 지속 성장 : 건축시장은 상당 기간 동안 재고 조정. 인프라시장이 당분간 글로벌 건설시장 성장 주도
 - 국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회복 지연 : 외환위기 때보다 침체폭이 작았고, 회복 시기도 빨랐으나 실업률 회복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
 - 국내 건설투자는 160조원대에서 정체 :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7년 25%를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16% 수준으로 감소
 - 정부 재정사업 및 SOC투자 비중 저하 : 2009~13년 간 정부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4.2%이지만, SOC 투자 증가율은 2.0%
 - 공공주택 공급비중 확대와 민간주택시장 위축 : 2000~07년 간 민간주택 공급비중은

*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공동 개최한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전환 세미나(2010. 4. 28)’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73.5%였는데, 2008년 62.0% → 2009년 56.0% → 2010년 53.9%로 축소 전망
- 2007년 이후 국내 건설수주 감소세 : 2007년 128조원을 정점으로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감소세로 전환
 - 해외건설 수주확대 추진 : 2009년 491억 달러 수주에 이어, 2010년 700억 달러 이상 수주 기대
 - 녹색건설시장 성장 본격화 :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2009~13년 간 107조원 투자계획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건설회계제도 변화 :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
 - 인구구조 변화와 건설수요 위축 : 고령화, 핵심생산인력 감소, 1인 가구 급증 등으로 중장기 건설수요 위축 전망

■ 지속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과제 제언

- 2008년 출범하여 추진되어 온 1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정부계약제도 중심의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음.
- 현재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2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지속성장 방안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조달정책 혁신 : 정부조달정책과 제도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
 - 건설금융 및 회계제도 선진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 글로벌 금융체제의 변화에 따라 건설금융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건설회계제도 선진화 추진
 - 해외건설 수주 연간 2,0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혁신과 지원 : 국내 건설시장 위축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 연간 2,0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 강구
 - 공공부문의 선도를 통한 녹색건설시장 활성화 : 주택경기 위축, 분양가 상한제 유지 등으로 민간부문의 그린홈 / 빌딩 / 시티 활성화는 기대 곤란
 - 건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지속 성장 기반 조성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파 남북통일 대비
- 2기 선진화위원회는 1기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 공공발주기관 우선혁신 등 기본철학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선진화 작업의 지속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상호(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 shl@gconst.co.kr)

미 캘리포니아주 그린빌딩 동향 분석*

- 강력한 시행의지로 각종 그린빌딩 정책 제안, 지속적인 성능 모니터링에도 주력 -

■ 미 캘리포니아주, 그린빌딩 정책의 선두주자

- 전현직 주지사의 강력한 시행 의지가 각종 그린 정책과 기준을 양산하는 한편, 실제 실행에 이르고 있음.
 - 신규 및 리모델링 공공 시설 : LEED Silver 이상 인증토록 권고
 - 이와 연계하여 CALGREEN(California Green Building Code)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자발적 규정이나 연내에 의무규정으로 전환될 예정임. 실제 그린빌딩의 건설 및 관리 업무는 캘리포니아 DGS(Califor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에서 담당함.
- 교육시설의 경우 CHIPS(Collaborative for High Performance Schools)라는 별도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음.
 - 현재 미 전역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LEED의 교육시설 인증과 경쟁할 정도로 발전
-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기준 480개 LEED 인증 그린 빌딩이 지어진 상태로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LEED 인증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200개 이상을 보유한 주는 없음.
 - 현재도 그린 빌딩 발주가 민간과 공공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LEED 인증을 받지 않은 친환경 건물도 있어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하위 지자체들도 활발한 그린빌딩 정책 전개

- LA 인근 산타모니카시의 경우 시 자체의 그린 정책과 빌딩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인력이 활동 중임.
 - 시내의 민간/공공 그린빌딩 관련 정책, 기술 지원,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
 - 산타모니카의 그린빌딩 기준은 이미 LEED Silver 기준을 상회할 것으로 시 당국자는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활발한 활동은 국내 지자체에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음.

* 본 내용은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미국 그린빌딩 벤치마킹 출장(4월 18~25일)에서 조사하였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높은 기준의 설계’+‘불편한 사용환경 감수’+‘사용자의 인식전환’ 등 三位一體여야 성공

- 그린 빌딩은 분명히 다양한 친환경적 설계 요소를 가미한 첨단 시설이며 사용자에게는 건강하지만 반드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음.
 - 지구와 인간에 대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빌딩에서는 기존의 시설에 비해 보다 절약하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함. 이를 통해 사용 단계에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임.
-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그린빌딩은 대량 소비의 문화에서 절약하고 줄이는 문화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됨.
 - 반면, 우리나라는 절약/절감 문화가 오랜 전통이었음. 미국 그린 빌딩의 특정 요소는 이미 한국에서는 일상화된 것도 다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정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기존의 냉난방 설비를 자연 공기 조화로 대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음.
 - 국가와 지역별 문화와 상황, 기후 조건 등이 상이하게 때문에 그린빌딩 전략은 지역별, 사업별로 특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재 재활용 등 기반 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 캘리포니아주 그린빌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부 LEED 인증 빌딩의 경우 자재 재활용률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매우 높다는 것임.
 - 반대로 국내와 같이 자재 재활용을 위한 산업이 취약한 경우 상당한 비용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린빌딩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수

- 현재 제공되는 그린빌딩의 각종 성능은 설계 단계에서 구축한 모델링에 따른 예측값임.
 - 미 버클리대학 로렌스연구소의 제한적인 샘플 연구이지만, 모델링 값과 실측값 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분석됨.
- 앞으로 그린빌딩의 실제 성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최석인(연구위원, sichoi@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4	전국경제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창출을 위한 건설분야 간담회’에 건설관리연구실 김우영 연구위원 참석 - 건설 분야의 고용 창출을 위한 상품 발굴 및 고용 창출 방안 도출 등 논의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제과 주최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실장 참여 -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TFT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제, 주요 연구기관 전망 담당자들이 참여한 거시경제 점검 회의에 참석
5.6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재해예방 관련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석 -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 - 3억~120억원 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방안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창립 기념 ‘녹색건설의 시장 여건과 실천과제’ 세미나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녹색건설의 실천과제’ 주제 발표 - 최근 유럽, 일본 등 외국의 녹색건설 관련 시장 동향과 전망, 우리나라 녹색건설시장의 여건 및 향후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제시

■ 신규 연구과제 발령

과제명	주요 내용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의한 건설업체 파급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상장기업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에 따라 주택 분양, 임대 및 민자사업 등 자본적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변화 예상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내용과 건설업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설업체 및 정책 당국의 합리적 의사 결정 유도 목적 ▪ 국제회계기준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 영향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경제 이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지역 일부 국가들의 재정 위기 심화, 미국 및 일본 등 우리나라 주요 경제 파트너들의 경기 침체 지속, 원화 환율 강세 등 국제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 ▪ 유가 및 철강재 등 건설산업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와 한미, 한EU 협상 등 다수 국가와 FTA 협상 진행 중 ▪ 최근 건설산업에서의 이슈로 부각되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건설기업,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적극 변신해야”

건설기업들은 선계약후시공의 산업활동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발주자 내지 수요자들은 건설기업에게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계약이행의 책임성, 품질과 공기준수에 대한 책임성, 안전 및 환경에 대한 책임성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뢰’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국민들은 건설산업을 신뢰가 부족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건설기업들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뉴노멀을 요구받고 있다. 즉, 기존의 탐욕적 이기심과 단기성과주의에 기반한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건설기업 성장전략의 키워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추구를 위하여 요구되는 실천 전략이다. 200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의 선도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건설기업들도 깨우친 이기심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영혼이 있는 기업’으로 적극 변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전략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자발성이다. 아무리 시대적 환경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해도 기업 내부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강력한 기업문화로 정착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내부의 제재 및 인센티브 제공은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략적 접근이다. 사회공헌활동과 같은 자선적 책임은 건설기업의 특성 및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명성과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은 선택·집중·지속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동체 접근이다. 건설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은 개별 기업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적 차원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대형 및 선도기업들이 신뢰와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정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